



◇장광근 의원이 개최한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직접시공 의무 확대는 건설산업의 전문화 및 분업화에 역행하고 종합건설업체의 위장직영 등 불법행위를 유발시킨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 전문업계 ‘직접시공 확대’ 강력반발

“직접시공 의무 확대는 건설 전문화·분업화에 역행”  
종합건설업체 위장직영·위장 하도급 등 불법 양산

장광근 의원 주최 ‘전문가 토론회’서 고강도 비판

전문건설업계가 직접시공의무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 주장했다.

지난 1일 국회 장광근 의원이 주최한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연구위원은 “직접시공 의무 확대는 건설산업의 전문화·분업화에 역행

하고 종합건설업체들의 위장직영과 위장 하도급 등 불법행위가 유발된다”며 직접시공 의무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3면  
유 연구위원은 “2006년 직접시공 제도 운영 이후 원래 목표로 했던 폐이퍼 컴퍼니 감소, 수익 향상, 품질 개선, 직접고용 증대 등의 실질적 효

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직접시공 의무제도는 사전 계획 단계에서 직접시공 할 공종과 하도급 할 공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계획·관리·조정에 투입되는 비용과 직접시공에 투입되는 비용의 구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코스카 중앙회 이서구 실장 역시 “지난 4년간 직접시공 불이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20만건 중 불과 5건에 그쳐 이미 실패한 제도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건설업자가 자유로운 시공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반면, 종합건설업계측 입장을 발표한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공기준수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부실업체 퇴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들 외에도 도태호 국토부 건설정책관, 김준한 포스코연구소장, 백석근 전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임재만 세종대 교수, 윤동호 동방건설 대표,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차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상곤 기자